

정부의 페미니즘은 기만이다

관련 기사 2, 5, 12면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현실의 변화보다
뒤쳐진 데다 미흡하다

2면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3면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5면

문재인 정부도
주택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다

6~7면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인종차별적 억압이
극우 쿠데타의 위협을
고무하다

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신자유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배자들에게 득이 된다

9면

여성 고용 위기
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12면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현실의 변화보다 뒤쳐진 데다 미흡하다

이현주

최근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의 가족 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이하 '4차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혈연·혼인·입양에 국한된 법률상의 가족 개념을 확대해 비혼 동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녀 성 결정 시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의 혈연·혼인 중심의 법과 제도들이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니,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여가부의 계획은 4월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계획은 가족 구성이 다양해진 현실을 뒤늦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30년 사이에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성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졌다. '전통적' 핵가족 모델이 약화됐고 생활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했다.

혼인이 감소해 2019년 결혼한 부부의 수는 고작 23만 9000쌍에 그쳤다. 기록이 시작된 1970년대 이래 최저치였다. 출산율도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 대신, 동거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 수가 증가했다.(1인 가구는 30년 사이에 세 배 이상 늘었다.) 결혼 제도 밖 출생도 증가해 왔다. 비혼 출산과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 가정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의 가족만을 '정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변해 왔다. 여가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현재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가족'이라는 인식이 70퍼센트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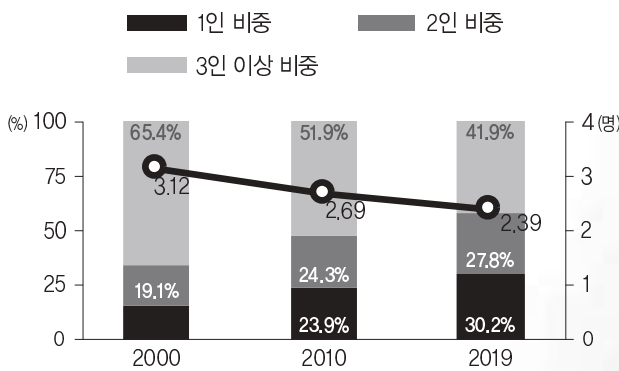
결혼이 필수적이라는 태도는 줄어든 반면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으로 변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08년 68퍼센트에서 2018년 48.1퍼센트로 10년 사이 급감했고, 비혼 동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같은 기간 42.3퍼센트에서 56.4퍼센트로 크게 늘었다.

성과 결혼, 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의 변화는 여성의 대규모 임금노동 유입과 고등교육의 확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다. 피임·낙태술의 발달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들은 집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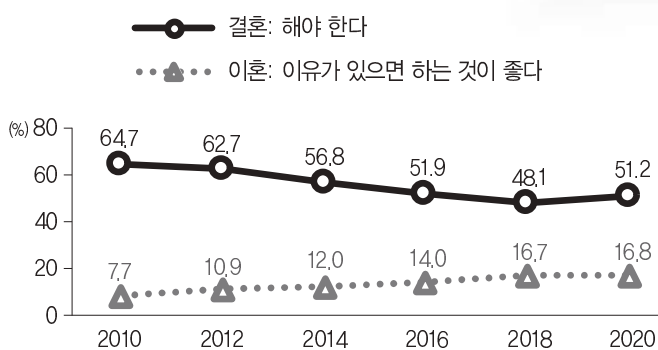
가구원 수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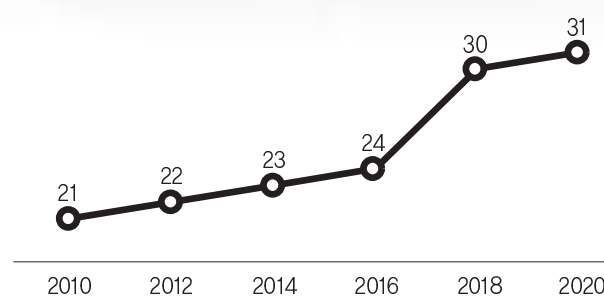
결혼 및 이혼에 대한 견해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성인 남녀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 모델은 크게 줄어 왔고, 이와 함께 성과 결혼,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의식도 변해 왔다

서 아내과 어머니로 매여 사는 것을 더는 꿈꾸지 않는다.

수십 년 전에는 혼전 성관계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져 외면당했지만, 개방적 태도가 확산돼 왔다. 오늘날 여성은 더 당당하게 성을 표현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성생활에 나타난 훨씬 더 광범한 변화의 일부로, 성생활은 점점 결혼, 출산과 분리돼 왔다.

다른 한편, 만성적 경제 위기 하에서 결혼·출산, 심지어는 연애마저 유예되거나 기피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취업이 어렵고 저임금으로 내몰려 삶이 불안정한 노동계급 청년들은 결혼·출산을 위한 재정적·정서적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배경에서 성인 남녀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 형태는 크게 줄어 왔다.

현실이 크게 변했지만, 많은 법과 제도가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 왔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계획은 한참 뒤늦은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성·동성 동거 커플은 연금, 보험, 배우자 대소사에 대한 휴가와 수당 등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수십 년을 함께 산 파트너가 죽어도 한푼도 상속

받지 못하고, 입차권이 승계되지 않아 함께 살던 집에서 강제 퇴거당하는 경우도 있다. 파트너가 아플 때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 곁에 있을 수조차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택 문제도 심각하다. 신혼부부가거나 자녀가 있으면 아파트 청약 시 혜택을 받지만, 동거 커플은 함께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다.

몇 년 전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연금, 난임 지원 등에서 법률상 부부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실혼임을 인정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서 그 대상이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 여러 다른 차별도 남아 있다.

한부모 가족들의 처지는 특히 매우 열악하다. 양육 책임이 개인들에게 떠넘겨져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기란 매우 어렵고 지독한 희생을 요구한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여전한 사회적 편견과 냉대도 커다란 고통을 준다.

이런 현실 때문에 법과 제도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회피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다양한 가족

의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도 있어 보인다.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혼 장려만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결혼 제도 바깥의 관계를 어느 정도 포용하고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상의 가족 범위 확대조차 종교계 등 우파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일관되게 이를 추진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가족 개념 변경은 우파 쪽에서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법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의구심을 키운다.

무엇보다 4차기본계획은 "다양한 가족"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에 크게 미흡해 보인다.

예를 들어, 이번 계획에서 양육·돌봄 지원 정책은 지난 제4차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이미 포함됐던 내용들로 '재탕'인 데다, 그 수준도 미미하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으로 논란이 됐던 비혼모의 보조생식술 이용 문

제도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쳤다.

또, 비혼·동거 가족들이 혼인·혈연 관계 가족들처럼 주거·의료·상속·연금 등 각종 권리를 보호받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거나 "중장기 방안"으로 미뤄 뒀다. 동성 커플에 대한 권리 보장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적잖은 비용이 들거나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 자신도 일부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될 만한 지출은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다 보니 한계가 큰 것이다.

이래서는 "다양한 가족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것이고 사람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으려면, 가족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 가족' 중심의 각종 사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보육과 돌봄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비혼 출산을 제약하는 규정도 없어야 한다.

정부 정책은 한참 뒤늦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에도 미흡하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양효영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주들이 개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상을 줄이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면하고,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처벌도 더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관련 기사 본지 364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너무 강력하다며 불멘소리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정부와 여야의 후퇴로 누더기가 됐다. 그래서 기업주 처벌을 강화해 안전 의무를 강제하고자 한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

대표적으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적용은 3년 유예돼 2024년 1월에야 시행된다. 2020년 산재 사망사고(질병 제외)의 81퍼센트(714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졌는데 말이다.

또, 건설 산업에서 원청이라 할 수 있는 발주처와 임대인이 책임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민주노총 등이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한 한익스프레스는 화재 사고로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의 발주처였다. 한익스프레스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으로 솜방망이 처벌(집행유예)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아예 처벌

대상도 아니다.

재계는 책임자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치 자신들이 예방은 잘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믿고 안전 고삐를 풀어왔다.

민주노총이 2013~2017년 산안법 위반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범률이 97퍼센트나 됐다.

얼마 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이 총 59건 지적된 태영건설은 올해 1~3월 사이 매달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그런데 대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2월에는 사망자 발생 이후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조차 법원에서 취소 가져분신청이 인용돼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다 또 사망자를 냈다.

이처럼 중대재해와 산재는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 그런 기업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국가 기관들에 의해 반복돼 왔다.

2022년까지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20년 전체 산재(사고와 질병)는 2019년보다 되레 늘어 2062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시행령에서 또다시 후퇴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지지율 하락 위기에 빠



산재 사망은 이윤체제가 저지르는 구조적 살인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열린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져 있기 때문에 노동계 눈치를 본다. 최근 건설사 몇 곳을 집중 감독하고 안전 문제를 엄중히 다루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그러나 우파에게 재계의 지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친기업 우경화 방향도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재계와의 만남을 부쩍 늘리고 있다. 이 속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든 후 시행령에서 또 뒤통수를 쳤던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영국 기업살인법은 효과가 있었나?

한국 노동운동 내 일각에서는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삼아 왔다. 그 법이 산재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주의자 사이먼 헤스터는 기업살인법이 1974년 제정된 산업안전법과 달리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내가 보건안전청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을 기소했지만 단 한 번도 기업살인법으로 기소한 적이 없다. 내 생각에 기업살인법은 너무 드물게 쓰여서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실제로 기업살인법이 2008년 발효된 후 이 법으로 기소된 기업은 겨우 26곳이다. 그마저도 25곳은 이전 법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경우였다.

한국에서 과대 포장된 것과 달리,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경영 책임자 처벌이 불가능한 데다 징역형이 없고 벌금형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이사들이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 영국의 중대재해 유가족들은 기업들이 돈만 내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이라며 기업살인법을 비판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공분은 컸지만 2000년대 영국은 계급투쟁 수준이 높지 않았고, 세력관계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안전법 보다 더 강력한 법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다. 1974년 정점을 이후로 영국 계급투쟁은 하강해 왔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영국에서 통계상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다. 산재 사망자 수는 1990년 400명대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며 현재 100명대에 이르고 있다. (국가별 산재 통계 기

준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나 한국과 달리 업무 중 교통사고를 산재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런 추세는 1980년대 이후 영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크게 줄어든 상황과 관련 있다. 조선업, 중공업, 탄광 등 사망이나 사고 위험이 큰 산업들이 줄거나 사라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명률이 낮아졌을지라도 안전 문제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부상자 수는 2019년부터 다시 증가했고, 업무 관련 폐암, 천식 등 질병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에는 79명이 숨진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가 발생했다. 건설 기업들이 불에 잘 타는 값싼 불법 외장재를 사용하고 안전 장치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벌어진 참사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아직까지 기업주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처럼 영국 기업살인법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제정 경험은 산재와 참사에 대한 대중의 광범한 공분만으로는 더 강력한 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적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강력한 계급투쟁이 뒷받침되지 못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로 통파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산재를 줄이고 작업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동자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층에서 산업재해에 항의하고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힘이 뒷받침될 때 더 강력한 법도 도입·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 영국의 경험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고 실제로 적용되게 만들려면 노동자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중대재해는 기업주들이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해서 벌어진다.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에 몰두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낭비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업과 긴밀하게 유착돼 있다. 국가는 단지 기업주 처벌에 미온적일 뿐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온갖 안전 규제가 완화됐고 이는 또 다른 중대재해로 이어졌다. (관련 기사 본지 272호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세계 노동운동의 경험을 보면, 노동계급의 투쟁이 강력할 때 작업장 안전이 증진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예컨대, 1970년대 초 영국에서는 계급투쟁이 활발해지자 기업주들과 정부가 산업안전에 대한 양보 조치를 내렸다. 1972년 20만 명이 참여한 영국 광원 파업으로 계급투쟁은 절정에 달했다. 1972~1974년 사이에는 공장

점거가 200건이나 벌어졌고, 대부분 사용자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공세적 투쟁이었다.

영국 지배계급은 1974년에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해 산업안전법(HSWA)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72년 국립 석탄위원회 사장인 로벤스 경이 제안했는데, 당시 석탄 산업은 노동자들이 강력하고 전투적으로 조직돼 있는 핵심 국유 산업이었다.

이 법은 기업주의 안전 의무를 강화했고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도 가능하게 했다. 일부 사용자 단체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산업안전법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 강화를 추동한 핵심적 힘은 기층 투쟁이었다. 전 영국 보건안전청 조사관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인 사이먼 헤스터는 이렇게 지적한다.

“이 시기 매우 높은 수준의 노조 조직률과 [노조 내] 노동안전 대표의 역할이 보건 안전의 기준이 개선되도록 했다.

“1974~1978년은 높은 계급투쟁 수준을 배경으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 시절이다. 노동조합원 수도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기업주들은 절박하게 사회적 안정을 원했다.

“영국 지배계급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높은 계급투쟁 수위와 강력한 기층 노동자 조직을 분쇄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그들의 핵심 전략적 목표는 기층 노동자 투쟁 지도자들을 사용자들과의 협력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산업안전법은 그런 전반적 방식에 걸맞았다. 그래서 산업안전법은 사용자들이 [안전 문제 등에서] 노동자 대표와 상의해야 하는 의무를 뒀고 보건안전위원회 같은 노사협력적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영국 산재 사망자 수는 1974년 615명에서 1980년 440명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74년 이후 투쟁이 하강하면서, 이미 노동당 정부 하에서 반격이 시작됐다. 1979년 보수당 마거릿 대처가 집권하면서 그 반격은 더욱 집요해졌다. 이러한 지배자들의 반격 속에서 작업장 조건이 다시 악화하며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1987년 지하철 킹스크로스역 화재로 31명이 사망하고, 1988년 파이프알파 해양플랜트에서 폭파 사고로 167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1986~1989년은 산재 사망자 수가 400명대에서 600명대로 급증하게 된다.

반복되는 끔찍한 참사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영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가 높아졌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장호중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려다 어민들이 반대해서 결정을 미뤘다고 알려졌다. 이번 결정 이후 일본 어민들은 물론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서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등 모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지지 청년들은 일본 대사관 앞 등에서 연일 항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걸러낼 것이라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 도쿄전력 자신의 발표를 보더라도 정화 작업 뒤에 오염수의 80퍼센트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올해 2월에도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1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됐다.

미국의 옹호

상대적으로 더 나은 처리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다섯 가지(지층 주입, 해양 방류, 수증기 방출, 수소 분해 뒤 방출, 지하 매설)를 놓고 비교했는데, 그중 가장 저



‘안전한’ 방사성 물질은 없다 4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청년들

렴한 방식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정부는 사실상 오염수 배출을 승인했다. 이들의 ‘국제 기준’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 준다. 그 ‘국제 기준’은 전 세계 핵발전소에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최소량을 뜻하는 것일 뿐 ‘안전한’ 기준이 아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도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 삼중수소도 예외가 아니

다.

미국 정부 등은 지난해까지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일본이 더 많은 구실을 하길 바란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이용해 바이든 정부를 설득한 듯하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직후, 문재인은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재판소에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말뿐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외교부 장관 정의용은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적절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4월 20일 국회 외통위 제출 자료에서도 제소 방안은 마지막 페이지

지에 슬쩍 지나가듯 언급됐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외면하고 배상 강제집행을 반대함으로써 결국 판결이 반동적으로 뒤집히는 데에 일조한 바 있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관되게 항의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승산이 없으니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정도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적이다. 한·일 관계를 꾸준히 보도해 온 〈한겨레〉길윤형 기자가 최근 그러한 견해를 폈다. 그는 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제2의 지소미아 사태, 즉 용두사미가 돼 정부가 망신당할 것을 걱정하는 듯하다. (‘대통령의 언어, 정의용의 고뇌’, 4월 20일 자)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지소미아 파기 ‘선언’ 그 자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제국주의 군사 동맹을 중요시해 파기 선언을 스스로 거짓말로 만들고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 “국제 관행”을 따르게 되기 십상이고, 그러면 국내 핵발전소 폐쇄도 일관되게 요구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안팎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 위험천만한 짓에 반대해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왜 핵발전소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일까?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핵산업계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비록 규모 9의 초대형 지진과 지진 해일의 충격이 엄청나긴 했지만, 핵발전소가 말 그대로 ‘폭발’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됐기 때문이다.

안전 매뉴얼에 관한 한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게다가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핵무기 피폭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만큼 핵발전의 안전성 신화가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반핵 운동가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것처럼 핵발전소는 ‘꺼지지 않는 불’을 안고 있고 이를 냉각시키기 위한 복잡한 장치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지진 해일로 외부 전력 공급이 두절되고 내부 디젤 발전기마저 침수돼 냉각 장치를 돌릴 전력이 사라진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그 불을 식히려고 아직도 물을 퍼붓고 있고, 앞으로도 수십 년은 계속 그래야 할 것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탈핵’을 선언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경각심을 낮추려면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더 많은 안전 비용

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핵발전소가 점진적일지라도 퇴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핵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정말로 탈핵은 대세가 됐을까?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가 전체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그 절대 수는 늘어왔다.

탈핵은 대세?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핵발전소는 441기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2011년 435기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수명이 다 돼 문을 닫은 핵발전소를 고려하면 규모가 더 큰 신규 핵발전소 수 증가폭은 더욱 크다. 지금도 52개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여기에는 중국(14기)뿐 아니라 미국(2기), 영국(2기), 프랑스(1기), 한국(4기)도 포함되고, 심지어 일본 정부도 2기의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다!(IAEA, 2021)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핵발전소의 설비용량이 최대 715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이 전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조차 핵발전소 설비 용량

은 2040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오는 2050년 371GW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사고를 경험하고, 발전 비용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주요국 지배자들이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지배자들에게 핵발전소가 단지 ‘값싼 전기’ 공장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합법적 핵무기 원료 공급처다.

사실 핵발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경제적’이지 않았다.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없다면 핵발전은 유지될 수 없다. 그조차 안전성에 대한 거짓말을 체계적으로 유포해 천문학적 규모의 안전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정부상 수지타산을 맞춰왔을 뿐이다.

정부와 공식 기관들의 ‘경제성’ 평가는 이런 거짓말들을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경제성을 이유로 ‘탈핵’을 추진하기는 난망하다. 문재인 정부가 고작 수명이 다 된 월성 1호기 하나를 폐쇄하려고 했을 때조차 우파들이 경제성 평가를 들고 나와 논란을 벌이는 것이 가능한 이유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 해에 탈핵 약속을 배신했을 때 정부가 내세운 이유도 따지고 보면 ‘경제성’이었다. 이

미 짓기 시작한 발전소 건설을 어떻게 중단하냐는 것이었다. 문재인의 공론화 위원회는 단지 이런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소형 핵발전소 관련 연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이 대세라는 낙관은 탈핵 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있었다. 안전성뿐 아니라 경제성에 관한 거짓말도 크게 약화됐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핵무기 원료 공급처

그러나 이는 핵발전소에 대한 지배자들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간과한 것이었다. 오늘날 환경운동 지도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핵무기 경쟁을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거나, 심지어 과거지사로 치부하기도 한다.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기 보유 열망을 지배계급 내 극소수의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여기기도 한다.

반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이런 기대가 설부른 것임을 지적해 왔다.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자들이 핵발전소를 유지하는 것이 근본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해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 경쟁은 국민 국

가와 거대 자본들의 세계적 경쟁, 즉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핵발전은 건설과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개별 자본가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해 주고, 그 덕분에 자본가들 다수의 지지를 받아 왔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등 노골적으로 핵무기 보유 열망을 드러내 왔다. 이를 고려하면 ‘탈핵’ 약속 배신은 오히려 일관된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의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독일조차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반년 전에 기존의 탈핵 입장을 번복하고 핵발전소 건설 재개 방침을 천명한 바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로 독일에서 반핵운동이 크게 벌어지자 재차 입장을 바꾼 것이었다. 물론 2022년으로 약속한 ‘탈핵’ 시점이 지켜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빌 게이츠 등 지배자들 내 일부는 사ibi 과학을 내세워 핵 발전을 기후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요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탄소 배출의 극적인 저감 노력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것이다.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전주현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다.

최근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됐다.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모의 소득은 3분의 1이나 줄었다(한국미혼모가족협회, ‘코로나19가 미혼모가족의 일과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지난해 11월 12일, 한국한부모연합이 주최한 “한부모 여성가장 연구결과 보고 및 토론회”에서는 실직, 저임금, 돌봄 공백, 생필품 구입의 어려움, 주거 문제 등으로 한부모들이 절박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생계급여를 받는 한 한부모 여성가장은 자신의 삶을 “7500(원) 살이”라고 표현했다. 2인 가구 한부모 생계급여는 고작 90만 원(3인 가구는 약 112만 원)인데, 하루에 7500원으로 버텨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들은 차별과 편견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해고 위협에 놓이기도 한다. 특히, 미혼모들은

‘문란하다’, ‘무책임하다’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남녀 결혼으로 이뤄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는 지배적 관념 탓에 한부모 가정은 쉽게 ‘비정상’으로 낙인 찍히고 차별에 노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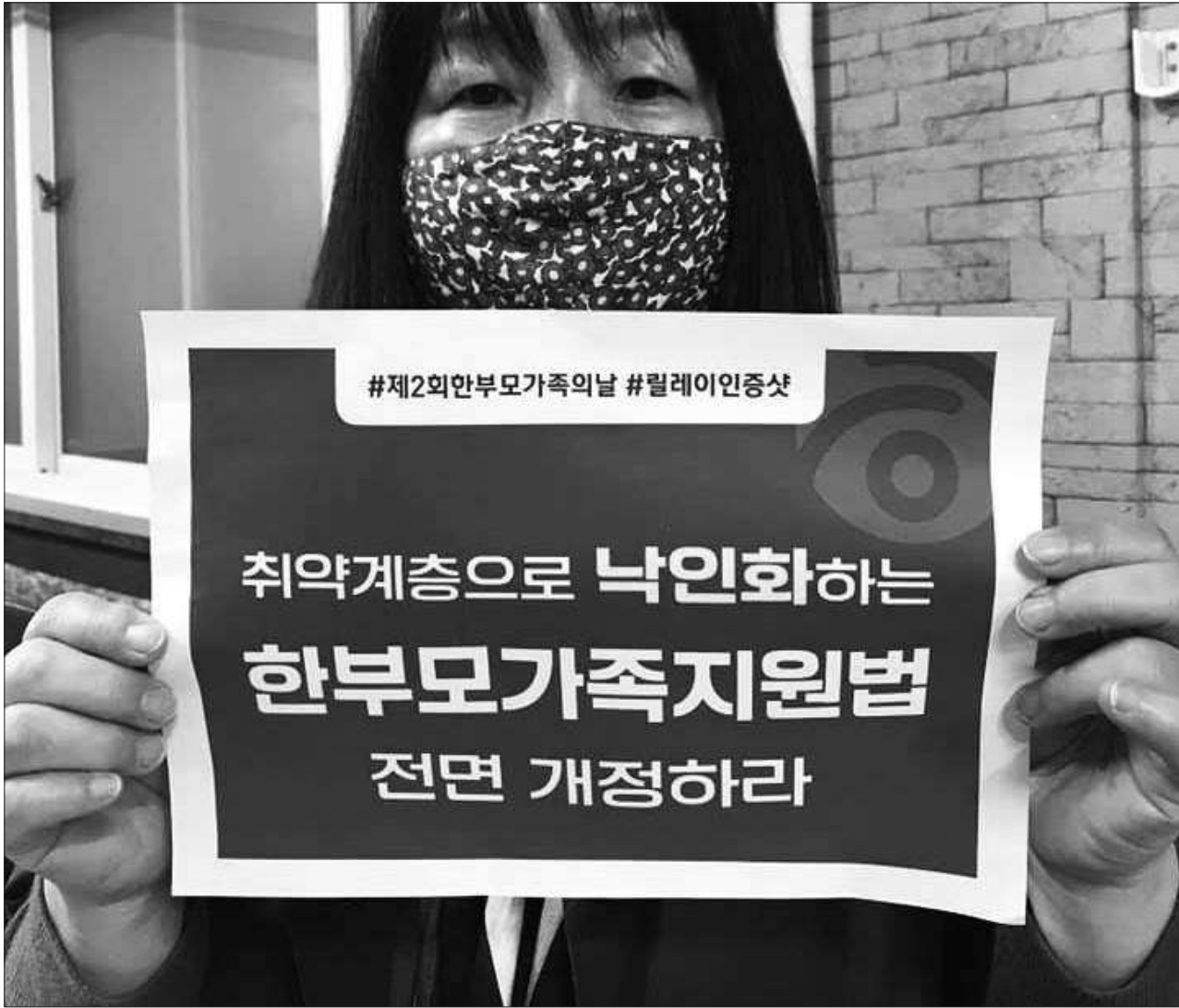
턱없이 미흡한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빈곤과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다양한 가족 포용 정책”을 내세우며 ‘한부모 가족 지원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약속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한부모 가족 아동수당 확대·생계급여 지원 조건 완화 등의 개선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정부의 지원 대책은 필요 수준에 한참 모자랐다(본지 345호: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또, 저소득 한부모만 지원하는 정부의 선별 지원 정책은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 한부모는 “가난을 증명”하지 않으면, 각종 수당은 물론 ‘한부모가족인증서’조차 받기 어렵다(관련 기사 본지 271호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이런 선별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듭 제기됐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올해 4월 27일, 여성가족부가 ‘제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삶을 개선하려면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가족 다양성 보장”과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등을 공언해 기대를 모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미하다.(관련 기사 본지 367호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 현실의 변화에 비춰 뒤늦은 데다 미흡하다’)

물론, ‘혼외자’와 ‘건강 가족’ 등의 차별적 용어 변경과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 개선안 검토 등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에 포함된 한부모 지원 정책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 정책을 대부분

재탕한 것이라 새로운 게 거의 없다.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차별적인 용어 개선뿐 아니라 안정적 일자리와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인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권력층이 분열하다

유리 프라사드

지난 몇 주간 코로나19가 인도 전역을 무참히 휩쓸면서 강성 우익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결국 어려움에 처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끔찍한 수준으로 치솟고 정부의 2차 대유행 대응 실패가 폭로되면서, 서민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환멸이 퍼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핵심 지역인 서벵골주의 수많은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인 인도국민당(BJP)과 그들이 편 협오와 분열의 정치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인도국민당은 서벵골주 선거에 돈과 조직자들을 대거 투입했다. 서벵골주는 수십 년간 공산당의 보루로 알려졌던 곳이다.

모디와 인도국민당의 유명 정치인들이 모두 서벵골주의 대규모 선거 유세 집회에 달려들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대중의 분노에 직면한 모디 정부에게 지배계급 인사들도 하나들 등을 돌리고 있다

반대 세력

인도국민당이 서벵골주에서 승리했다면 모든 반대 세력을 누른 셈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신랄한 정부 비판자이자 현직 서벵골주 총리인 마마타 바네르지는 주의 회 전체 294석 중 200석을 넘게 얻어 승리했다. 인도국민당은 80석을 얻는

데 그쳤다.

다른 지역에서도 성적이 좋지 못하다.

아소카 대학의 정치학자 질 베니에는 이렇게 말했다. “인도국민당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모디라는 브랜드가 퇴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적절한 조직과 협치의 부재를 만회하기에 역부족임

을 보여 줬습니다.”

이제 모디가 어려움에 부딪힌 듯 보이자 지지자 일부가 그를 떠나고 있다.

지탄의 대상이 돼 온 세럼인스티튜트[인도의 세계 최대 백신 제조 기업]의 최고경영자 아다르 푸나왈라는 인도 정부의 실패를 비난했다.

푸나왈라는 세럼인스티튜트가 생산하는 코비실드 백신 가격을 대폭 인상해 커다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엄청난 수익”을 원한다고 대놓고 말해 왔다.

푸나왈라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백신 정책 실패를 탓하며 정부를 공격했다.

실패

푸나왈라는 지난 주말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디가 지난 2월 백신을 2100만 회분만 주문했다고 말했다. 모디 정부는 백신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언질을 주지 않았으며, 몇 주 후 당황

한 모디가 1억 1000만 회분을 추가 주문하려 했지만 이를 따라갈 수 없었다고 했다.

인도 정부가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새로운 대유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의료 체계 붕괴 탓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인도 백신 제조업체들은 백신 부족을 해결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푸나왈라와 인도의 대형 제약회사들은 오랫동안 집권 여당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지해 왔다.

이제 모디 정권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더 많은 지배계급 인사들이 모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만큼 좌파가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운동은 모디 정권을 뒤흔든 여러 대중운동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운동은 이제 새로운 자신감을 갖고 거리로 돌아와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53호 / 번역 강미영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와 진정한 대안

강동훈

이 글은 4월 30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 '자본주의와 주택 문제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놔다. 최근인 2월 4일에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주택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

트 값은 83.9퍼센트나 올랐다.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6년을 모아야 서울에 25평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은 셋 중 하나가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를 전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부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수십~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 게다가 최근 LH 사태로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토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을 사 사리사욕을 취해 왔음이 드러났다. 대중의 박탈감과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열악한 주택 상황

노동계급의 상당수가 과밀하고 건강에 유해한 주택에 산다. 이 문제는 노동계급이 거주할 만한 주택이 부족한 것과 주로 관련이 있다. 정부는 2018년 기준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104퍼센트로, 주택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9퍼센트이고 서울은 96퍼센트로, 주택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게다가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가구 수가 실제보다 적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가구수는 '일반가구수'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당장 외국인 가구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약 200만 명 중 상당수가 주택보급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주택 수 집계는 오히려 높게 잡혔을 가능성이 크다. 주택보급률의 주택 수는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집계한다. 그래서 다 가구나 원룸을 불법으로 나눠 여러 개의 쪽방을 만들더라도 각각이 1주택으로 간주된다.

노후주택도 실제의 주택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한국에는 30년 이상 된 주택이 310만 호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냉난방 시설이나 부엌, 창호 등이 낡아서 양질의 주거를 할 수 없는 경우일 것이다.

노동계급이 거주할 만한 주택이 부족한 것은 다른 상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치를 수 없는 수요가 '유효수요'로 간주되지 않는 것과 관련 있다. 다시 말해, 집값과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택 수요는 무시되고, 적은 임대료만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쪽방이나 지하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거주지가 공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상당수는 주택을 소유할 수가 없다.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자기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는 비율)은 58퍼센트밖에 안 된다. 10가구 중 4가구가 다른 사람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것이다. 서울은 더 심각해서, 자가점유율이 42.7퍼센트밖에 안 된다

(수도권은 50퍼센트). 지난 25년을 살펴봐도 서울의 자가점유율은 40퍼센트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오르내렸다.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다른 OECD 국가들과 견줘도 낮은 편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8년 OECD 37개국의 평균 자가점유율은 69.7퍼센트였다.(이 중 32.7퍼센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구이므로 사실상 월세와 비슷하지만 말이다.)

이에 따라 정부 기준으로도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6퍼센트, 120만 가구에 이른다. 대부분 거주 가구원 수에 비해 집이 너무 좁거나 방 수가 부족한 경우다. 2018년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31.7제곱미터로, 일본의 40.2제곱미터보다도 작고, 미국에 견주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은 60제곱미터를 넘지 못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식구가 많아도 그저 59제곱미터 안에 살 수밖에 없다. 원룸에 사는 가구 중 13.4퍼센트가 2인 이상 가구라고 한다.

2015년 기준 36만 3896가구가 지하(반지하)층에 거주했고, 5만 3832가구가 옥탑층에 거주했다. 지하(반지하)층과 옥탑층에 거주하는 가구를 합하면 41만 7728가구가 된다. 여기에 더해, 고시원에서 약 15만 가구, 여관에서 약 3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자가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노동계급의 적잖은 사람들은 자가가격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계급 상당수는 살 집이 없어 좌절하는 동안 소수 부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때돈을 벌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악화되는 주택난

한편, 자본주의 하에서 주택 가격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문제는 점점 더 많은 노동계급 대중이 금융과 연결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에도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문재인은 정부 책임론을 피하려고 경제 불황과 유동자금의 투기화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변명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물론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기 불황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낮춰 왔고,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쳐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생산에 투자되지 않는 유동자금이 금융, 특히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 있다.

이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3000조 원 넘는 돈(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서, 부동산과 주식 주변으로 흘러드는 자금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넘쳐나는 유동성은 의도했던 투자와 소비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려, 후자의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사실 2010년대의 장기 불황은 그 직전에 주택 시장에서 거대한 거품이 형

성됐다가 꺼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08~2009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공황은 2000년대에 급성장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붕괴하면서 터진 것이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같은 시기 한국의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집값이 급등하며 주택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빚내서 집사라”?

이처럼 주택 시장에서 형성된 거품의 붕괴는 가계부채 상황에 큰 어려움을 안겨 주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 공황이 발생하면 전체 자본주의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 설사 금융 공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택 거품의 붕괴는 소비에 악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유행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집값이 급등할 때 어렵게 빚을 내어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은 이후에 대출 이자를 갚느라고 허덕이느라 다른 소비를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주택 시장의 침체는 또한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져, 경기 침체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 시장과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처하게 됐다. 한국 정부는 흔히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진자 운동을 하는 식으로 대처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으려고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세금 인상 정책을 썼지만, 경기가 침체하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3년 공공주택분양 공급 축소,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등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8월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했다. 결국 이런 정책과 세계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시중 자금 때문에 박근혜 정부 후반부부터 집값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주로 부동산 담보 대출 억제로 돌아섰다. 거품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두루 알다시피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정도로 급증했다. 39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다. 증

▶ 7면으로 이어짐

흔들리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결국 자본주의에서 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 주택을 늘리는 데 있다. 즉, 양질의 영구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만 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1980년대 말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퍼센트에 그쳤다. 네덜란드(40퍼센트), 영국(22퍼센트), 스웨덴·독일(20퍼센트)

등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다.

서구 국가들에서도 신자유주의로 복지가 삭감되면서 공공주택이 대거 민영화되고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감소해 왔다는 점도 봐야 한다. 예컨대, 2006년 209만 채에 이르던 독일의 공공임대주택은 2018년에는 117만 채로 무려 44퍼센트나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독일 베를린 시가 뛰는 임대료를 잡으려고 임대료 인상 상한

제를 시행했으나, 독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는 일이 있었다. 이 판결에 분노한 사람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우파 언론들은 주택 시장을 거스르는 임대료 상한제가 오히려 주택난을 심화시켰다고 아전인수식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독일에서 주거 복지가 계속 악화된 결과 집값과 임대료가 급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주택 문제와 사회주의적 대안

주택 문제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들인 노동자들이 과밀하고 건강에 유해한 주택에 살게 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것은 현대의 노동계급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모든 계급사회에서 천대받는 계급들이 겪었던 문제이다. 결국 주택 문제는 생산수단 지배자들이 노동하는 대중을 착취하는 문제의 파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는 이 문제가 자본주의적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여가치의 배분은 판매와 구매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지·주택의 소유자가 그것을 판매하거나 임대함으로써,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배분되는 것이다. 게다가 토지·주택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금리의 영향(화폐의 쏠림)을 크게 받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의 중심지인 대도시가 형성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제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불균등 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생산 중심지들은 전국 각지로부터 노동력을 집중시키고, 이에 따라 대도시에서 주택난이 벌어진다. 한국에서도 1960~80년대에 국가 주도로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도시들이 급성장했고 주택난이 심각해졌다. 특히, 한국은 후발 자본주의 나라라서 국가가 한정된 자원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시켜 왔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

이런 경향은 최근까지 계속돼 2019년 수도권의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처음으로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에 지방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유입 인구는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찾는 청년(19~34세)이 대부분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심각해지고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수도권 유입이 더 늘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도 더욱 가중됐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 문제도 시장의 논리에 내맡겨지면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주택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지배자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주택 투기에 뛰어 들고, 부패가 행해지고, 노동자들은 더욱더 주택난에 시달리게 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끊임없는 경기변동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거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결국 주택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찍이 엥겔스는 《주택 문제에 대하여》에서 신기술 도입과 산업 격변이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길거리로 내몬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따라서 그야말로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집도 언제나 빌리려는 사람이 나타나며, 끝으로 가옥 소유자가 자본가로서 자기 소유의 가옥에서 최고의 집세를 무자비하게 짜낼 권리뿐 아니라 또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회가 존속하는 한 주택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자본주의 하에서 증대한 사회 생산력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잠재력을 만들어 냈다. 이 능력이 이성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집이 필요한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집을 지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주택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자본가들의 큰 주택과 그들이 소유한 큰 건물들을 대중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엥겔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대도시에는 합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현실의 ‘주택난’을 모두 즉각 시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주택용 건물이 있다. 그런 일은 물론 오늘날의 소유자들로부터의 물수를 통해서만, 즉 숙소가 없는 사람들이나 이제까지의 주택에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노동자들을 그들의 가옥에 수용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공의 복지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조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 권력을 전취하자마자, 마치 오늘날의 국가에 의한 다른 물수와 수용이 그렇듯이 쉽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25평대 서울 아파트 가격(82.6 제곱미터 기준)이 6억 6000만 원에서 82퍼센트(5억 3000만 원)가 오른 11억 9000만 원이 됐다고 밝혔다.

11억 9000만 원

6억 6000만 원

▶ 6면에서 이어짐

가 폭도 홍콩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여전히 활성화시키고 싶은 문재인 정부는 ‘임대 사업 활성화’ 정책을 내놔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집은 사는(때때) 것이 아니라 사는(거주) 곳’이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며 임대 사업 활성화를 추진했다. 여기에는 ‘모두가 내 집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매매 위주의 주택 시장을 임대차 중심으로 끌고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자 민간 임대 사업자들,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정부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막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임대료 상승 억제 정책도 내

놔지만 임대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컸다. ‘양도소득세 70퍼센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이라는 ‘트리플 혜택’이 제시됐다. 이런 세제 혜택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늘어났고, 기존 다주택자들뿐 아니라 1주택자들도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다주택자가 되고자 했다. 결국 “빛내서 집 사리”의 시즌2가 펼쳐졌다.

한편, 집값이 급등하자 문재인 정부는 다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퍼센트로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에 견주면 보유세 강화는 ‘폭탄’이 아니라 ‘뺨’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재보선에서 패배하자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다시 깎아 줘야 한다는 애기들이 나오면서 그나마 후퇴 조짐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우파의 압박을 받아

서, 그리고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내놓았다. 3기 신도시 개발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내놓은 것이다. 엥겔스가 지적하듯이 “주택 문제”에 대한 대부르주아와 소부르주아의 해결의 핵심은 노동자가 자기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경실련의 조사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신규 주택 공급 500만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0만 가구는 다주택자의 사재기였다. 앞서 살펴본 서울과 수도권 등의 자가점유율이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도 공급된 주택의 대부분을 다주택자들이 매입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시장 논리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부유층들이 투기할 수 있는 주택 수를 늘리는 데만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인종차별적 억압이
극우 쿠데타의 위협을 고무하다

찰리 캄프

프랑스 극우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하기가 무섭게, 프랑스 정부가 이주민·무슬림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4월 28일 프랑스 국무회의에 제출된 새 법안에는 단속과 경찰력을 더한 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웹사이트 접속 기록, 메신저에 대한 감시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테러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이 새 법안은 [무슬림을 겨냥한] “반(反)분리주의” 법이 마지막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와중에 제출됐다.

“반(反)분리주의” 법에는 공공장소에서 18세 이하 여성의 hijab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미 프랑스 정부는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경찰의 만행을 촬영하는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 법은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들과 ‘노란 조끼’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탄압으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도입됐다.

탄압 강화는 더 많은 극우 세력들을 고무한다.

4월 21일 퇴역 장성 23명이 “군교의 폭도”를 다스릴 확실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정부가 아



마크롱은 위기 속에서 커져 가는 대중의 불만을 경찰력 강화로 통제하려 해 왔다. 파리의 세계노동절 시위에 배치된 경찰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현역 전우들이 우리 문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위험한 임무에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사망자 수가 “수천을 헤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성명은, 프랑스 정부가 알제리 독립을 인정한 것에 반발한 쿠데타가 일

어나고 실패한 지 60년이 되는 날에 발표됐다.

성명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형식을 취한 이 성명은 극우 주간지 <발포르 악튀엘>에 게재됐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퇴역 장성들은

“이슬람주의”를 적의 하나로 꼽았다. 또 다른 적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오늘날 어떤 자들은 인종 정체성론, 토착민 민족주의, 탈식민지론 운운하지만, 혐오와 광신에 물든 그 지지자들이 이용어뒤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인종 간 전쟁이다.”

<발포르 악튀엘>에 따르면, 이후 1000명이 넘는 퇴역 장성이 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차기 대선 여론조사 몇몇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파시스트 마린 르펜은 이 성명에 힘을 크게 실어 줬다.

르펜은 연명한 장성들에게 “우리의 운동에 함께하고,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전투에 참여해 달라” 하고 호소했다.

르펜은 장성들의 분석을 칭찬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조국의 회복과, — 말하자면 — 구원을 위해 당당히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 장관 플로랑스 파를리는 르펜을 비난했다. 그러나 단지 군대를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르펜의 말은 군 기관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보여 준다. 군 통수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군대를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르펜의 제안은 우리 군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프랑스를 약화시킬 것이다.”

프랑스는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 19 위기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사회 지배층 위기를 부채질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온갖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정치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탄압을 강화하고 추악한 극우 세력을 고무하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53호 / 번역 김지혜

미얀마 항쟁, 무장 투쟁으로 전환되는가

지난 주말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학살이 다시 늘었다. 군부가 더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선언한 지 고작 며칠 만이다.

군인, 무장 경찰, 총을 쏘는 사복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군부 통치에 맞서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는 4월 24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회의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 대표들은 미얀마 상황을 안정시키려 했다. 시위와 전투가 국경 너머 중국과 타이로 번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가 여기에 따르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명백히 ‘보여 주기용’일 뿐이었다.

항쟁의 중심지인 양곤에서는 사복 경찰이 청년 시위대 수십 명을 경찰 표식이 없는 차량에 밀어 넣었다. 시민들이 이 광경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



국가의 학살에 맞선 항쟁 참가자들의 무장 저항은 완전히 정당하다

시위대 복장을 한 경찰이 고성능 소총을 들고 시위 대열 언저리에서 사격 자세를 잡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했다.

미얀마 북부 산주(州)에서는 경찰이 나웅키오의 봄비는 거리에 무차별 사

격을 가해 윈 나잉 씨가 목숨을 잃었다. 한 60세 노인도 총상으로 숨졌다.

무슬림인 시위 참가자 포 로 씨는 군인들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군인들은 집에서 나오는 민간인은 누구든 발포하겠다고 위협한 후 총을 쏘다.

그러나 상황이 모두 군부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십 년째 정부와 싸워 온 여러 소수 민족 무장 단체들은 새로이 활기를 띠고 군부를 압박하고 있다. 5월 3일 카친독립군(KIA)은 카친주를 공습하는 군 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그보다 며칠 전 카친독립군은 정부군 항공 기지로 쓰이는 바모공항을 포격했다.

전투는 중국 접경지대에서 가장 치열하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 남부에서는 카렌족 투사들이 타이 접경지대의 정부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많은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이 민주주의 투쟁 지지를 선언했다. 지금까지 이들은 군 병력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교전으로 분산시키는 데에 주력했다.

그러나 미얀마 언론 <이라와디>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도시의 수많은 민주주의 항쟁 활동가들이 카친주와 카렌주에 도피해 있다.

그곳에서 이 활동가들은 도시로 돌아가 군부 정권에 맞서 싸우려고 군사 훈련을 받고 있다.

증오스러운 정권에 맞서 운동이 무장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압력이 엄청나다. 이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미얀마 민주주의 항쟁의 막강한 위력은 파업·시위 같은 대중적 전술을 이용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동원한 데에 있었다.

국가의 학살에 맞선 무장 저항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양질의 무기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소수가 중요해지고 대중 저항은 부차화될지도 모를 위험이 따른다. 그렇게 된다면 정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53호 / 번역 김준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신자유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배자들에게 득이 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 많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경제부 편집자 크리스 자일스는 최근 이렇게 한탄했다. “좌파가 경제 사상 대결에서 이기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월 미국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이 도입한 세 가지 대규모 정부 지출 정책 때문이다. 가장 나중(4월 28일)에 발표된 “미국 가족 계획”은 보육 보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에 1조 80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많은 좌파가 바이든 집권기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뉴 레프트 리뷰》 편집자 수전 왓킨스는 최신호에 실은 매우 흥미로운 글에서 좀더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개척한 이래,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유시장을 찬양해 왔다.

그러나 퀸 슬로보디언이 중요한 저서 《세계화주의자들》에 썼듯이 신자유주의의 목표는 “시장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에서 보호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위협에서 자본주의를 면역시키는 것이다”.

왓킨스는 이런 의미의 신자유주의가 유럽연합에서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증명한다. 지난한 협상 끝에 유럽연합은 팬데

믹에 대응해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회복기금(NGEU)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그 할당액을 신중하게 책정해 각국 정부에 지급하고 있다. “경제 정책에 대한 대중 민주주의의 영향력으로 본다면,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참 멀었다.”

그러나 미국의 지출 규모는 비할 데 없이 크다. 유럽연합의 지출 규모보다 250퍼센트나 크다. 3월에 미국의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21.1퍼센트 증가해 사상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연 소득 7만 5000달러 미만인]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한 덕이다.

왓킨스가 지적하듯이 “사회적 급여 면에서 미국 구제 계획은 따라잡기를 하고 있다.”

따라잡기

바이든의 부양책은 미국의 복지가 서유럽에 아직 남아 있는 복지보다도 훨씬 취약한 상황을 만회하려는 것이다.

왓킨스는 또한 바이든의 전략에서 그녀가 말한 “국가적-제국주의적” 측면에 주목한다. 지난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바이든은 이렇게 연설했다. “우리는 21세기를 놓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커다란 변곡점에 있다. 우리는 미국을 재건하는 데에 … 그쳐서는 안 된다. 더 강하게 재건해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바이든은 정부 지출을 이용해 미국 제국주의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으려 한다. 레이건과 대처도 당대에 자국에서 같은 목표를 추구했다.

그러나 왓킨스가 지적하듯이 “그 실천들은 ‘포스트신자유주의적’일지 몰라도 여전히 확고하게 자본주의적”이

며 실로 제국주의적이다.

데이비드 하비가 탁월하게 주장했듯이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경제적 지배층의 권력을 …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계급 세력 균형을 자본에 이롭게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대에는 경쟁의 힘을 이용해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규율을 부과해서 그런 변화를 꾀했다. 파산과 대량 실업은 조직 노동자 운동을 약화시키고 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이윤을 끌어올렸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런 시장 규율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는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값싼 신용 화폐의 막대한 유입에 의존해 왔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더 심화됐다. 이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은 정부가 추가 지출 재원을 마련하려고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고전적 신자유주의는 경제가 정치와 엮이지 않도록 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종속시켰다. 오늘날 시장은 다시 정치화되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다. 그러나 이 변화가 노동자들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았다. 노동자들의 조직은 여전히 크게 약화돼 있으며, 여전히 시장과 뻔뻔한 고용주들의 공격을 막아 내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핵심부인 유럽과 미국에서 노동자들은 팬데믹 동안에 코로나19 지원금, 임시휴직 같은 제도로 타격을 약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경제가 결국 재가동되면 종료되기 시작할 것이다.

노동이 아닌 자본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화된 경제의 모순이 뚜렷해질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53호 / 번역 최병현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조 바이든

지난달 바이든은 유례 없는 규모의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이것이 과연 신자유주의를 끝내는 전환점이 될 것인가?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조수진 전교조 전국대의원

해직 교사 5명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일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4월 23일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가 조희연 사퇴를 요구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5월 4일 해당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우파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엔 교단에 복귀한 교사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억압적인 법에 희생된 피해자들이다.

이 중 4인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지는하 후보에게 후원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고 나서 후원금을 모금했다가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딱지가 붙어 억울하게 해직됐다. 또 다른 교사 1인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단 것'이 해직 사유였다.

부당하게 해직되고 수년간 고통받은 후에야 특별채용 형식으로 교단에 복귀시킨 것은 오히려 뒤

늦은 회복 조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복직 요구가 제기된 지 한참이 지난 2018년에야 이 교사들을 특별채용 했다.

특별채용 형태로 해직 교사들이 복귀한 것은 보수교육감 시절에도 있던 일이다. 예컨대, 공정택 교육감도 여러 차례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임용한 바 있고, 문용린 교육감은 2013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사학 민주화 관련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 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문제 삼으며 징계를 요구한 것 때문에 '표적 감사', '정치 감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조사가 '무리하게 유도 신문해 확인서를 작성'한 수사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히며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좌관,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여러 차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도 있다.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킨 조희연 교육감은 매우 정당하고, 징계 받아야 할 이유 또한 전혀 없다.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미 2월 16일에 "수급이 어려운 분야에 박사급 전문가 등을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한시 임용하는 제도 신설" 계획을 밝혔다(고교학점제 종착 추진계획). 또한 순회 강사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교원도 배치하려고 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강원대학교 연구진의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그때까지 1만 2000여 명의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규 교사 총원은 하지 않고 비정규직 교원 증원으로 때우려 하는 것이다.

교육의 질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미 학교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비정규직 교원 제도가 도입돼 이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이미 채용된 강사들은 정규직화해야 하고 이들이 교원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연수나 유급휴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존 정규직 교사들의 노동조건 악화로도 연결돼, 결국 교사 전반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된다. 교·강사의 불안정한 지위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학생들에게도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역대 정부들은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처지가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를 양산해 왔다. 2000년 전체 교원의 3.76퍼센트였던 기간제 교사 비중이 2018년에는 17.53퍼센트까지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요구는 무시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

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기간제 교사 증가세는 줄지 않고 있다. 2016년 4만 6666명이던 기간제 교사 수는 2020년 4월 5만 7776명으로 4년 만에 1만 명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사 수를 충원해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기간제 교사 채용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미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네 명 중 한 명이 기간제 교사인 실정이다. 여기에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교원자격증 없는 비정규직 교사가 대폭 늘어난다면 교육의 질은 더 악화할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성적 경쟁과 입시에 유리한 교과목에 집중되는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졌고,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나 선택과목 강사와 같은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은 현행 입시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함께, 정규 교원을 충원하고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할 때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르노삼성 또 직장폐쇄, 맞서야 한다

이형주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 조합원

5월 3일 르노삼성차 사측이 부산공장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파업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파업 불참자들과 대체인력을 모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위기 속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희망퇴직'으로 500여 명을 공장에서 쫓아냈고, 120여 명은 순환휴직으로 내보냈다. 남은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높아져 고통받았다. 또, 일부 정비사업소를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먼 곳으로 전출 보냈다.

사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역대 최악의 임단협 제시안을 내놨다. 2020년과 아직 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2021년의 2년치 일시금으로 500만원도 안 되는 금액만 받으라고 한다. 보통 받던 1년치 일시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게다가 4년 연속 기본급 동결도 요구했다.

사측은 판매 실적이 좋을 때에도 미래 물량과 고용을 위한 자구책이라며 임금을 동결했다. 그런데 이제는 적자

가 났다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분노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특히, 터무니없는 임단협 제시안이 나오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대거 동참했다. 4월 30일 전면파업 지침이 갑자기 나왔는데도, 노동자들은 스스로 모임을 조직해 토론하고 파업에 동참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파업에 불참하고 일했지만, 곳곳에서 조합원들이 다른 노동자들을 설득해 파업에 동참시켰다. 결국 오전에는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오후에 멈췄다. 사측은 남은 파업

불참자들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는 5월 3일 6시간 파업에서도 이어졌다.

수출 물량 생산에 열을 올리는 사측은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직장폐쇄를 꺼내 들었다. 2019년부터 파업 때마다 직장폐쇄를 한 게 벌써 세 번째다.

효과적인 전술

직장폐쇄 첫 날인 5월 4일에 일부 노동자들이 출근해 공장을 가동했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 활동가들은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했고, 퇴근 길에는 다수 노조인 르노삼성차노조 집행부도 별도로 홍보전을 했다. 출근한 노동자들이 부끄러워 했다.

다수 노조 집행부는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사측의 교섭 태도가 변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5월 6일에는 공장 내 조합원 집회 계획도 세웠다.

그런데 사측은 6일 집회가 "생산시설에 대한 노동조합의 접근 및 점거가 능성까지도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다소 느슨했던 파업 노동자



롯데택배 울산 화물터미널. 사측은 비용을 아끼려고 노동자들을 매우 비좁은 공간으로 밀어넣었다

롯데택배 울산 새 터미널 정부 지원금 챙기고 작업장 환경은 열악

김지태

코로나19로 택배업계가 호황이다. 가령 롯데택배는 지난해 코로나 특수를 포함해 최근 3년 간 매출이 연평균 16.2퍼센트씩 급성장했다.

이런 성장 속에서 택배사들은 치열한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더 많은 물량을 더 빨리 배송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필요는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 속에 과로와 노동강도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5월 3일 롯데택배는 울산에 기존의 화물터미널 (3곳 중) 2곳을 통합해 새 터미널을 개장했다. 그런데 사측이 비용을 아끼려고 공간을 여유 있게 짓지 않아 노동자들은 매우 비좁은 상태에서 일하며 힘들어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택배 상자가 실려 오는 레일과 택배 차량 사이에 자신이 배송

할 물건을 쌓아두고 신기 때문에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새 터미널은 이 간격이 기존보다 1미터나 좁은 2미터에 불과하다. 택배 차량 주차 공간도 비좁아 가장 안쪽의 차량은 물건을 다 실어도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다.

이 때문에 가뜰이나 긴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 노동자들의 고통이 상당하다. 강대민 전국택배노조 울산롯데지회 조직부장은 “노동자들이 힘들든 말든, 회사는 최소 비용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새 터미널에서 일한 첫날, 기존보다 한 시간 늦게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늦어 지면 교통량이 적은 한적한 시간대를 지나게 돼서 더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합니다.”

새 터미널엔 택배 상자의 분류를 자동으로 해주는 설비인 휠소터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정부가 자동화 설비 도입에 연 5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택배사들은 이 지원을 받으

며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휠소터를 설치하기 위해선 부지를 더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하는데, 사측은 정부 지원은 챙기면서도 충분한 공간은 마련하지 않았다.

울산지역 롯데택배 노동자들은 새 터미널 개장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사측에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사측은 원래 한 줄에 25대가 주차해 짐을 싣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그나마 22대를 주차하게 변경됐습니다.”

곧 새 터미널에 더 많은 인원이 일하게 되는데, 부족한 공간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 뻔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십 명이 일을 하는 데도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도 거의 없다.

롯데택배는 즉각 울산 새 터미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한 사업인 만큼, 정부도 작업 환경에 대해 관리·감독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이정원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구제신청을 한 44명 중 41명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동안 이스타항공 사측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잔인하게 전가해 왔다.

지난해에 사측은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성사를 위해 500여 명을 해고했고, 7월 하순에 매각이 불발되자 추가로 700여 명 감축을 추진했다. 결국 100여 명이 사측의 압박으로 회사를 떠났고, 2020년 9월에는 605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사측은 1년 가까이 임금도 체불했고, 심지어 4대보험료도 체납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과 그 일가는 부를 쌓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고, 매각 대금까지 챙겨 발을 빼려 했다. 이상직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과 일주일 전에야 구속됐다.

이 과정 내내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상직을 지원하고 감쌌다.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과 해고로 고통받는 데도 매각을 적극 지원했고, 매각이

불발된 후 대규모 정리해고가 벌어지는 것도 묵인했다. 사측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 고용 위기 대책조차 활용하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이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사용자의 신청으로 적용되도록 만들어져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대해서 “매각을 통한 회생이 먼저”라며 무시했고, 임금 체불 조사도 1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으며,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취업 알선이나 하려했다고 폭로한바 있다.

따라서 이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정부에게 일자리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번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뿐 아니라 정리해고된 전원을 다시 복직시켜야 한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상태에서 인수자를 찾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기업 회생안 제출 시한인 5월 20일 이후 법원은 청산이나 재매각이나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설사 재매각이 결정된다 해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자들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마땅하다. 매각 추진이 아니라 정부가 이스타항공을 국유화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리해고 철회 촉구 결의대회

들의 공장 출입 금지를 통보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대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이야말로 정당한 노동자 투쟁을 가로 막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와도 아랑곳 않고 공장을 돌렸던 사측이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도 우습다.

그러나 이것은 사측이 파업 노동자들이 공장 내에서 집회를 하고, 그것이 점거 농성 등으로 이어져 결국 수출 물량 생산에 차질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 준다. 이런 점 때문에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은 직장폐

쇄에 맞서 공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공장 점거 진술을 사용했다. 노동자들이 연좌하고 생산 시설을 통제하면, 사측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물론, 사측과 보수 언론은 ‘불법’이라며 공장 점거파업을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파업 파괴 행위야말로 부당하다. 그리고 점거 농성장은 연대의 초점이 될 수 있다. 광범한 연대를 건설한다면, 이런 비난에도 맞설 수 있다. (관련 기사: 본지 2020.1.30자 ‘잡재력과 동시에 도전 과제를 제시한 르노삼성 파업’)

르노삼성차지회는 직장폐쇄 전 날 다수 노조 집행부에게 조합원들을 동원해 대체인력을 공장 출입구에서 막고 그것이 풀리면 “현장을 점거”하자고 제안했었다. 안타깝게도 다수 노조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두 노조의 노동자들은 함께 단결해 싸우면서도, 거둬들인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설 효과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느 노조에 속해 있든 함께 사측에 맞서고 있는 조합원·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5월 4일 공장 앞에서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르노삼성차지회 활동가들



여성 고용 위기

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정진희

코로나19 발생과 그로 인해 심화된 불황으로 여성 고용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남성 고용도 감소했지만, 여성의 피해가 더 컸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이 가장 큰 대면 서비스업에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고, 보육시설과 학교가 문을 닫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한 것의 영향이 크다. 많은 여성이 임시직·일용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위기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성이 가정에서 양육 등 돌봄에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와 운영 방식 때문이다.

자본가들에게는 이윤 생산을 위해 여성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미래 노동력 공급에 필수적인 양육 등 돌봄 지원에는 매우 인색하다.

자본주의 국가는 여성 노동력 활용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일부 늘려 왔다. 하지만 이윤 추구가 동력이고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 때문에 국가는 양육과 성인 돌봄의 주된 책임을 여전히 개별 가족에게 전가한다.

생색내기 정부 대책

문재인 정부는 고용 위기와 돌봄 부담 증가로 노동계급 여성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도 생색내기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코로나19로 가정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면서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늘어난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관련 기사 본지 358호 '코로나 위기로 악화된 여성의 삶').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올해 3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여성 고용 위기 대책도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일자리 정책의 대부분은 이미 전에 내놓은 방안의 재탕이거나 지원 대상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쳤다. 또, 정부가 만든다는 일자리의 많은 수가 임시·단기 일자리이다(관련 기사 본지 359호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친화적 태도를 취해 온 여성단체들조차 정부의 여

성 고용 대책에 실망을 나타내며 비판했다.

그런데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정부의 지원책을 '남성적' 또는 '남성 위주' 방안이라고 부정확하게 비판한다. 정부가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많이 돌아갔고, 산업지원금이 남성 집중 업종에 지원된다는 것이 그 근거로 꼽힌다(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평가 대토론회' 발표문).*

여성이 겪는 고용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의 미흡함을 비판하며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는 취지는 옳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 대책을 성별 격차 중심으로만 보면 남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 가려지기 쉽다.

남성이 집중된 업종에 대한 지원이 곧 남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정부 지원의 대부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준 것이었다.

지난 1년여간 정부가 노동자의 고용·실업 지원에 쓴 지원금(총 4.7조 원)은 기업 지원 총액(91.2조 원)의 20분의 1밖에 안 났다. 지난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은 노동자 수도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3.8퍼센트에 불과했다(이창근, '코로나 1년 고용·실업대책 실적 분석', 민주노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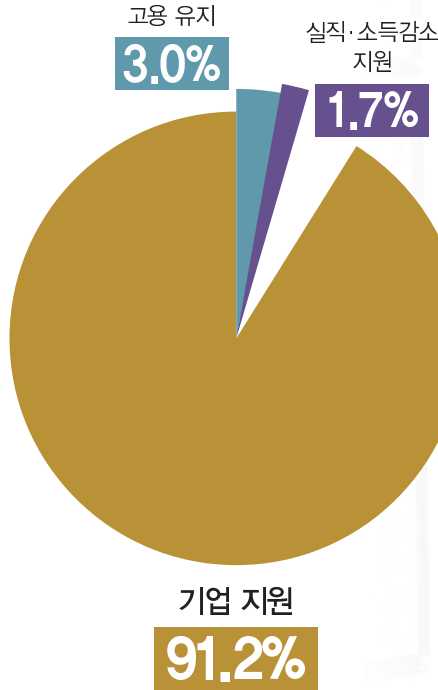
이렇듯, 전체 그림은 노동계급 전반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가운데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더 미흡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남성 중심적'인 게 아니라 시장경제적·친자본주의적이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받은 노동자 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해고를 막지도 못했다. 사용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몇 달간 유급휴직을 실시하다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이마저 중단하기 일쑤였고, 10퍼센트도 안 되는 휴직급여 부담을 피하려고 '희망퇴직' 형식을 빌어 일부 정규직을 해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해고에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이다(관련 기사 본지 364호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업의 해고를 규제하지도 않으므로, 기업주들이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보다는 무급휴직이나 해고로 나아가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

기업 지원, 고용·실업 대책 실적 비교

(출처 이창근, '코로나 1년 고용·실업대책 실적 분석')



지난 1년여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쓴 돈은 대부분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돌아갔다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의 단결 투쟁이 중요하다

이윤 체제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난이나 불황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노동계급과 서민층이 진다.

지배계급의 삶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과 매우 다르며 여성 사이에서도 계급적 격차가 크다. 부유층 여성들은 평소에도 노동계급 여성을 고용해 가사와 돌봄을 처리하기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노동계급 여성과 서민층 여성들처럼 돌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했지만, 상층의 소수 여성과 남성은 부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 위기는 노동계급 전체가 겪는 위기의 일부이다. 물론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영향은 노동계급 내에서도 불균등하다. 돌봄 부담의 성별 격차뿐 아니라 산업·기업별 영향이 불균등한 것도 노동자들의 조건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이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공격이 폭넓게 일어나고

있다.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아졌다.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도 전년 대비 5만 8000명이 감소했고, 그중 여성이 4만 4000명으로 75.9퍼센트를 차지했다(정경윤, '문재인 정부 평가 대토론회' 발표문).

사용자들의 공격이 여러 형태로 강화되는 상황이므로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조건 악화를 막으려면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중요하다.

여성 고용 위기를 해결하고 성평등을 크게 전진시키려면 개별 가정에 맡겨진 돌봄이 필수 사회서비스가 되어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학교, 병원, 보육·요양·장애인 시설 등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개선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사기업에 내맡겨 둘 게 아니라 국가가 재정을 대폭 투입하고, 임시직·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동안 봐 왔듯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이를 기대할 수 없다.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이들의 실제 목표는 성평등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를 위

기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 동안에도 정부는 기업 지원이 우선이었고, 고용 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인데도 공공기관의 일자리마저 줄였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전년보다 1만 명이 줄었다. 여성 채용 인원은 5185명 줄어들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늘어난 여성 일자리도 열악한 일자리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처럼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쳐서 시간제 여성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겪는 고용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 공급과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우파 야당 모두 자본주의를 구제하는 데만 열심이고, 이를 위해 노동계급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공격을 벌이고 있다.

조건 후퇴에 맞서고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려면,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서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과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 3월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톱'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이 남성 중심의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남성적' 회복 방안이라고 비판했다.